

KWDI

해외통신

2019년 2월 2차 (2019.2.16~2.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 CANADA



캐나다 페미사이드 현황과 특징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사회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용어는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여성 혐오 범죄로 기록되는 1989년 몬트리올 기술대학(L'École Polytechnique de Montréal) 총격사건을 계기로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당시 25세 청년이었던 마크 르팽(Marc Lépine)이 강의실로 난입하여 학생들을 남과 여로 분리, 14명의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페미니스트이고 나는 페미니스트를 증오한다! (you're all a bunch of feminists, and I hate feminists!)”라 외친 후 14명의 여학생 모두를 총살한 사건으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은 페미사이드라는 용어를 광의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범죄'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 캐나다 학계에서 이 용어는 단순히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아닌 사회적, 법적, 보건 분야의 인권 문제가 얹힌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 문제가 살인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정의와 책임을 위한 캐나다 페미사이드 감시단(The Canadian Femicide Observatory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이 발표한 페미사이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콜 잇 페미사이드(#CallItFemicide)는 지난 20여 년간 페미사이드의 추세 변화, 주요한 특징, 이를 타겟으로 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캐나다에서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이 29%를 차지하며, 관련 통계가 가용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이 비율은 24%(2008년)에서 38%(1981년) 사이까지 유지되어 왔다. 전체 살인 사건에서 남성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 가까운 남성에게 의한 여성 살해라는 페미사이드적 특성이 뚜렷이 통계적으로 드러난다.

참고자료

- The Canadian Femicide Observatory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http://www.femicideincanada.ca>
- HuffPost, Talking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Shouldn't Inspire Misogyny Talking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Shouldn't Inspire Misogyny, https://www.huffingtonpost.ca/women-s-shelters-canada/violence-against-women_a_23657827/
- The Canadian Femicide Observatory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CallItFemicide: Understanding 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 and girls in Canada 2018, <https://femicideincanada.ca/callitfemicide.pdf>

- 2015년 남성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인구 백만 명당 45건인 반면, 남성이 여성 연인에게 살해된 빈도는 인구 백만 명당 9건에 그쳤다. 1975년부터 2015년 사이 캐나다의 살인사건 수는 인구 백만 명당 40.1건에서 20.4건으로 40% 가량 감소했는데, 여성이 연인사이인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페미사이드의 경우 같은 기간 37% 감소에 그쳐, 남성이 부인이나 여자친구 등에 살해당하는 경우가 69%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캐나다의 관련 정책이 가정폭력에 희생되는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겨냥했음에도 정작 여성에 의한 남성 살인사건이 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정책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다른 성별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에 취약한 연령 또한 남녀가 상이하다. 여성의 경우, 11세 이하(인구 백만 명당 40.7건)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이 25-29세 구간(인구 백만 명당 14.7건), 18-24세(백만 명당 14.7건), 30-39세(백만 명당 11.8건) 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이 희생되는 경우는 25-29세 (백만 명당 52.5건) 구간이 가장 위험, 그 다음이 18-24세(백만 명당 43건)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할 확률은 성인보다는 청소년에 더 높음이 드러났다.

📌 캐나다 매니토바(Manitoba)주와 사스카추완(Saskatchewan)주의 원주민 여성은 캐나다 전체 여성 인구에 비해 살해·실종될 위험에 19배 더 노출되어 있으며, 같은 해 원주민 여성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5%만을 차지하지만 살해사건 피해자의 24%를 차지해, 원주민 여성에 대한 페미사이드는 단순히 이들이 여성이라서 살해당한다기 보다는 캐나다 사회의 인종주의, 원주민 사회의 오랜 사회·경제적 주변화,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상황을 꾸준히 방관해온 캐나다 정부의 정책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다.

독일 GERMANY



독일, 개정된 낙태법에 대한 비판 이어져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독일 내각이 낙태 ‘광고’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제 219a조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앞으로 의료진과 의료 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병원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낙태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해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의사 협회는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와 병원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abtreibungs-werbeverbot-warum-spricht-keine-rueber-gebaerheid-a-1251628.html>
- <https://www.dw.com/en/german-cabinet approves-revised-abortion-law/a-47382601>

현재 독일에서 낙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다만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은 누구나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의 여성이 임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낙태 수술이 허용된다. 그러나 많은 독일 병원은 가톨릭 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어 낙태 수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독일은 지금까지 형법 제 219a조에 따라 의사가 낙태 수술 시행 여부는 물론 낙태 수술 과정과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Werbung)’도 금지해 왔다. 그간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과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219a조는 나치 시대의 유물이며 이 조항은 여성이 낙태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의사 업무를 범죄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해 왔고, 의사와 전문 의료진들도 여성이 낙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219a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회민주당, 녹색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형법 219a조 폐지를 주장했지만 CDU(기독교민주당)/CSU(기독교사회당) 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형법 219a조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일부 내용만 개정됐다. 앞으로 여성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술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과 상담 센터, 그리고 독일 의학 협회와 상담해야 한다.

이에 219a조 폐지가 아닌 일부 내용 수정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저널리스트 마가레트 스토크프스키는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승인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으며,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별다른 진전 없는 상태에 다시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진들이 인터넷에 낙태 수술 여부를 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에 대한 과정과 위험 등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는 ‘광고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비판했다. 사회민주당에서 여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노이힐 의원도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여성과 의료진을 유죄 영역에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낙태는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지난해 독일 기센(Gießen)의 지방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인 크리스티나 헤넬(Kristina Hänel)에게 6,000유로 벌금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촉발되었다. 헤넬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낙태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제공의 문제로 여성들이 늘 응급 상황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다.”며 “여성들이 수술 방법이나 위험에 대해 미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의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많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의사나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던 헤넬 의사의 항소는 부족하게나마 일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이 오는 4월, 한국에서 이뤄질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페인에서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1월 15일, 스페인 도시 곳곳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가장 인구가 많은 안달루시아(Andalusia) 주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주 의회에 입성한 극우정당 복스(Vox)당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복스(Vox)당은 극구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극우정당이 중앙 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 독재가 종식된 1975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같은 안달루시아 새 지방정부 출범 결과로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의회가 위치한 세비아(Seville) 이외에도 수도 마드리드(Madrid)를 비롯해 다른 지역 약 100여 곳에서 복스(Vox)당 반대 시위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시위에는 약 140여개 이상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참가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그렇다면 복스(Vox)당과 양성평등, 여성정책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런 시위가 발생한 것일까?

시위내용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스페인의 현 가정폭력법이다. 젠더기반폭력법이라고도 불리는 본 법안에 대해 산티아고 아바스칼(Santiago Abascal) 당 대표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발된 사건의 87% 가량이 취하되었는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고 남성들이 억울하게 폭력 가해자로 고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도 않고 사건이 취하된 것이 무조건 그 사건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복스(Vox)당은 현 가정폭력법이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본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스(Vox)당의 100대 공약 캠페인 프로그램에는 가정폭력법 폐지, 낙태 시술에 대한 공공보건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폭 삭감, 여성할당제 폐지(모든 선거에 여성 후보 40% 할당, 2007년 도입), 극단적 성향의 여성단체 해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낙태를 금지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정책을 추진하도록 가족정책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선거 이후, 복스(Vox)당은 지방정부의 여성단체 지원 폐지, 가정폭력법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연합정부의 주축인 보수정당 성향의 국민당(Popular Party)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스(Vox)당은 반 유럽연합(EU), 반 이민 정서 등을 기반으로 언론과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어 여성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복스(Vox)당의 목소리가 앞으로 다양한 정책분야에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이제 막 새롭게 안달루시아 지방 연합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복스(Vox)당의 행보가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이 스페인의 현 여성 관련 정책적 제도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할 만하다.

참고자료

- El Pais (2018), "Far-right Spanish political party Vox: What are its policies?" 2018년 12월 3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8/12/03/inenglish/1543832942_674971.html (접속일자: 2019년 2월 23일)
- El Pais (2019), "Spain's far-right Vox asks for names of gender violence workers in Andalusia," 2019년 2월 22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9/02/22/inenglish/1550852190_868783.html (접속일자: 2019년 2월 23일)
- El Pais (2019), "Thousands of women march across Spain against far-right party Vox," 2019년 1월 16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9/01/16/inenglish/1547626335_145006.html (접속일자: 2019년 2월 23일)
- Politico (2019), "Spain's gender gap: The far right has made the battle against 'supremacist feminism' a key part of its message," 2019년 1월 23일자, <https://www.politico.eu/article/vox-feminism-spain-far-right-gender-gap/> (접속일자: 2019년 2월 23일)



독일 의회, '남녀동등구성법' 논의 최초 시작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최근 독일 정치권에서는 독일 의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를레이 법무부 장관과 여성의원들은 선거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채우거나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남녀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남녀동등구성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연방의회의 여성의원들은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ünen), 자유민주당(FDP), 좌파당(Linke)의 대표 여성의원들로 이뤄진 '연방의회 여성 국회의원 연합그룹'을 결성하고, '남녀동등구성법'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연합그룹은 첫 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의회에서도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의회 스스로 여성의원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치 없이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독일 의회는 2017년 연방 선거 이후 여성의원 비율이 31%로, 과거 독일 연방의회 여성 비율(2009년~2013년 32.8%, 2013년~2017년 36.8%)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정당별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녹색당과 좌파당이 각각 58.2%, 53.6%로 가장 높고, 이어 사회민주당이 41.8%다. 자유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은 20%대에 그쳤으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여성의원 비율은 10.9%다.

주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낮은 상황으로 튀링겐(Thüringen) 주가 40.6%, 함부르크 37.2%, 브란덴부르크 36.4%, 라인란트팔츠 35.6%, 자를란트 35.3%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로 여성의원 비율이 24.5%이고, 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 바이에른도 25~26%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연방의회 차원의 '남녀동등구성법' 제정이 이뤄지려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남녀동등구성법 최종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는 선거에 출마하는 남녀 후보자 수를 같게 지명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0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의회 정당별 선거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별도의 선거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같은 수의 남녀를 후보자 목록으로 최종 작성하게 된다. 지난 1월, 브란덴부르크에서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 앞으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참고자료

-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undestag-parlamentarierinnen-diskutieren-ueber-paritaetsgesetz-a-1253274.html>
-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paritaetsgesetz-mehr-frauen-in-die-parlamente-a-1251237.html>
-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randenburg-parlament-beschliesst-gleichstellungsgesetz-fuer-landtagswahlen-a-1250985.html>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여성의원들이 정치 영역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레리 호네 저널리스트 역시 독일 언론 ‘슈피겔’ 기고를 통해, 법 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직접 여성의원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기본법 3조에 따르면 국가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의회는 더 많은 여성이 정치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후보자 명단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